

#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 및 연구 동향

김창권 | 전주대학교 교수 | chkkim@j.ac.kr

## 1. 서론

금년은 독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sup>1)</sup> 독일통일 1세대가 거의 지나가는 시점이기에, 독일통일 직후 논란이 되었던 여러 독일통일정책에 관한 중장기적 성과를 판단·비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시점에서 통일독일의 경제적 고민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독일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서의 여러 통일경제정책과 공과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지구상 유일하게 통일의 어젠다를 갖고 있는 한국에 무한한 지식 보고의 역할을 해준다. 역사·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상이한 동서독 간의 통일 경험이 남북한의 통일 논의를 위하여 가치가 있는가에 관해 異論의 여지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남북한 간의 통일에 대하여 보편적 선례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통일 이후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변화에 관하여 꾸준히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독일 내 관련 연구의 문헌조사(literature survey)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작업은 독일통일 이후의 중장기적 변화에 관한 事後的 인지를 통해 한반도 통일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이후의 변화를 事前的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른바 통일비용을

1)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독일통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부터 독일통일 시점인 이듬해 10월 3일 까지 동서독 간의 협약뿐만 아니라 대외국가들과의 외교적 절차 등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기에 이 기간을 독일통일이 된 이후로 간주할 수는 없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일통일의 과도기로 표현하고 있다.

축소할 수 있어 한반도 통일 시 효율적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남한경제로의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래 어느 시점에 도래할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급변 사태의 모습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는 아무리 통일 이전에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하여도 통일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급진적인 통일경제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히 준비하거나 시뮬레이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 직후 잘못된 정책 시행의 결과는 (혹 경우에 따라서는 되돌릴 수 없는) 매우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 과정의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시 통일 직후 처음부터 보다 적절한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독일통일 과정을 다룬 기본적인 경제모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정치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여러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통일 25주년을 기점으로 최근 10년 이내 발행된, 독일통일 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1세대가 가까운 독일통일 이후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정책들에 관한 회고적 의견 또는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지, 아울러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독일통일에 관해 최근 무엇이 관심사인지를 정리하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 II. 독일 내 주요 기관별 통일 이후 동독 경제 연구 특성

통일 이후 동독 경제의 변화나 동독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제반 경제정책의 성과 등에 관한 연구는 독일통일 20주년을 전후해서는 주로 독일의 저명 경제연구소인 DIW, IWH 등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이들 연구소 간 또는 대학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몇몇 경제전문가 등에 의해 저서 형태로도 이루어졌으나, 그 수가 독일통일 직후와 비교해서는 현저히 적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일 후 동독 경제에 대한 구분된 연구가 최근에 올수록 독일 내 관심에서 멀어진 결과의 소치이다.<sup>2)</sup> 즉, 2000년대에 들어서서 통일 이후 동독에 대한 연구는 지역경제학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통일 직후 집중되었던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재는 통일독일 및 유럽연합 관점에서 추진되기에

2) 독일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사례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인지하고 있다. Brenke and Zimmermann(2009), p.5 참조. 그러나 동서독 간 생활수준의 균등화가 여전히 요구되고 있기에 독일 정부는 동독지역의 재건이 중요 정책과제임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BMI(2013) 참조.

별도로 통일경제정책이라고 구분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서는 동서독을 분리한 시계열 통계치도 비용절감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다.<sup>3)</sup>

한편, 독일통일 20주년 즈음의 연구들은 20년간 동독 경제의 변화 및 성과 등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말까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동독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ltmann *et al.*(2012) 및 Blum *et al.*(2011)은 미래지향적 정책적 대안 제시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통일 이후 동독 경제의 성과에 대하여 최근의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Kullas[2011]).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Brenke and Zimmermann[2009]), 이는 물병에 들어 있는 물을 바라보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물이 “1/3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네!”라는 부정적 평가와, “2/3나 (벌써) 채워졌네!”라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중장기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는 논문들에는 통일 초기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체제 전환 및 통합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가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 1. 독일경제연구소(DIW)

DIW는 독일 통일경제정책 및 통일 이후 경제적 성과 등에 관한 연구를 통일 직후 활발히 수행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특정 연도, 예를 들면 통일 10주년이나 20주년에 자체 논문집을 통해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전자는 Bach and Trabold(2000), 후자는 Brenke and Zimmermann(2009)으로 특히 후자는 “장벽 붕괴 후 20년 구동독 경제: 회고,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통일 이후 20년 시점에서 동독 경제 주요 분야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되,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1989년 및 1990년의 독일통일 과도기에 수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당위성 여부와 파급효과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회고해 보았고, 통일 이후 쉽게 좁혀지지 않는 동서독 간 경제력(삶의 수준 및 생산성 등 포함)의 격차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데 원인과 결과로서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동독의 중장기적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격차 해소 여부와도 관련된 독일통일의 재정 충당 및 공적 채무 추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학켈(2000), p.19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5개 신연방주에 연구 목적에 따라 베를린 포함 여부를 정하여 통계치를 추출한다.

## 2. 할레경제연구소(IWH)

구동독지역인 할레(Halle)에 위치하고 있고 독일통일 이후 1992년에 새로 설립되어 이른바 독일 6대 경제연구소의 하나로 편입된 IWH는 설립 초기 구동독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점차로 유럽통합까지로 확대하고, 혁신, 생산성, 시장 및 지역경제 등 미시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안정화정책 등 거시경제적 이슈까지 분석하는 전방위적 경제연구소이다. 하지만 구동독 지역경제에 더 특화된 연구소라 할 수 있어,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의 경제 변화를 수시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DIW와 마찬가지로 통일 10주년 때 세미나 논문집 IWH(2001)를 발행하여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 재건으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경쟁력과 인프라 그리고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이 통일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대량실업이 지속되며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2/3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동서독 간의 격차가 해소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통일 20주년을 즈음한 IWH의 주요 연구 성과물로서 첫째, Blum(2010)의 세미나 논문집이며 둘째, IWH(2009; 2010)의 연구소 저널 ‘전환기 경제(Wirtschaft im Wandel)’의 두 편에 걸친 연구논문들과 Blum *et al.*(2010)을 들 수 있다. Blum(2010)은 통일 20주년의 경제적 이슈들을 크게 3개 주제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거시경제적 과정으로 무엇보다도 독일 통화통합과 이후 유럽 통화통합으로의 연계를 설명하였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다른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와 다른 독일만의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동독지역의 국가와 시장 간의 새로운 관계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② 산업부문별·지역별 발전을 살펴보되 공간적인 발전패턴과 정착 및 도시구조 등에 있어서 동서독 간의 수렴 여부를 연구하였고, ③ 사회정치적 내적 구조, 즉 국가 관점에서 재정적 안정화, 노동시장의 동력 그리고 이와 함께 체제전환과 결합된 가치의 변화 등과, 아울러 구동독 기업가의 시장경제로의 여정, 미래 입지로서 구동독지역의 가능성 등에 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IWH(2009; 2010)는 독일통일 20년 시점에서 동독의 경제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이슈로 동서독 간의 수렴, 이주, 동독의 수출, 산업구조, 도시경제,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성과, 조세구조, 국가부채 및 시·군 재정 등을 다루었다.

Blum *et al.*(2010)은 독일통일 20년간 구동독지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경제적 변화를 경제사회지표로 구성된 표와 그래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후술할 BMI(2013)

과 유사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동독지역의 전반적 경제상황을 기술하되, 생산, 소득, 수요 및 수렴 여부, 인구 추이, 지역경제력 및 지역 간 조정 메커니즘, 고용 및 실업 현황, 혁신, R&D, 인적자본 및 교육, 동독 시·군 발전전략 및 주거상황, 가계, 가족 및 공동체 등의 생활 형태 그리고 동독과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 사이의 비교까지도 수행하였다.

### 3. 연구소 공동 연구 성과물

Blum *et al.*(2011)의 “동독의 경제현황 및 전망”은 DIW, IWH, ifo(뮌헨대 경제연구소), IAB(연방노동청 고용연구소), HoF(비텐베르크 대학연구소) 및 RWI(라인-베스트팔 경제연구소) 공동 연구로 통일 20주년 시점에서 동독 경제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독일통일 당시 경제 현황 및 주요 체제전환정책(예를 들면 통화-경제-사회통합 국가조약, 1990. 5. 18)을 재검토하고, 통일 이후 20년간 동독의 경제적 성과를 3단계로 구분하고 노동시장 및 임금, 연구개발 및 혁신, 구조적 격차와 수렴 등 부문별로 평가하였다. 한편, 동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로서 ① 경제의 소규모화와 국제화 기업에서의 리더의 부재 해결, ② 수출경쟁력 제고와 핵심 소재 및 부품 등 연구개발과의 연계, ③ 클러스터 동력 확보, ④ 미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의 개발, ⑤ 동독 노동시장의 전망을 토대로 하고 또한 인구 추이와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한 전문 인력 공급 확보, ⑥ 시·군 재정과 도시 개발 등을 꼽았고 이에 대한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4. SFB 580

독일연구재단(DFG)의 중장기 협동연구과제로 구동독지역 예나 및 할레 대학교를 중점 대학으로 하여 “체제붕괴 이후 독일 사회의 발전”에 관한 특별연구, 이른바 SFB 580가 수행되었다. SFB 580은 1989~90년 체제붕괴 이후 동독에서의 사회발전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사회주의 붕괴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들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독지역의 후발주자로서의 현대화과정 변화뿐만 아니라 통일과정 및 세계 변화에서 제기되는 도전적 과제에 대한 동독 고유의 대응전략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일은 장기적 여정”이라는 시각에서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부문에서 체계적인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주요 연구 분과로 ①

엘리트 형성 및 재생산, ② 인구 변화 시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③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개인 및 사회 자원 활용, ④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모델 정립 등이 속한다.

한편, SFB 580의 직접적인 연구 성과물은 아니나 SFB 580의 책임연구자인 할레대학교 E. Holtmann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공동연구한 성과물 Holtmann *et al.* (2012)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Holtmann *et al.* (2012)은 통일 20주년 즈음에 발간된 여러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주요 의제를 간추려서 —“동독 2020년: 재건된 동독의 미래”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 100여 명이 넘는 경제 전문가들로부터의 설문조사를 심층분석하여 동독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① 2020년 이후 동독의 경제전망, ② 동독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서독과의 균등화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 ③ 연방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어느 것을 계속 유지하며, 잘못된 것은 무엇이며, 수정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④ 어떻게 동독 내에 자생력을 배양하여 경제발전의 격차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⑤ 동독의 법제도 및 질서, 행정구역 그리고 교육제도는 적절한지, 그리고 ⑥ 동독 경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 5. BMI(2013)

독일연방 내무부에서는 통일 이후 구동독의 경제 및 사회 등 전반적 부문에 대한 성과를 기술하고 주요 경제 이슈 등을 정리한 “독일통일의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연차보고서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를 1997년 이후 매년 발행하고 있다.<sup>4)</sup> 통일독일 전반에 걸친 생활수준의 균등화를 위해 삶의 질 및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들의 특히 동독지역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교육, 민주화, 자연 및 문화 등에 관한 변화를 관련 통계와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기술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동독지역에서 분명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서독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동독 재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4) 1996년 5월 연방 의회의 결정에 의해 통일독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영역에서 동서독 간 전반에 걸쳐 삶의 수준이 균등화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방 내무부로 하여금 통일독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 6. 기타 주요 문헌

통일 이후의 동독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평가한 상기 기관별 연구 성과물 이외에도 독일통일 20주년을 즈음하여 나온 몇몇 주요 경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물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 1) Paqué *et al.*(2010)

독일 경제전문중앙도서관(ZBW)에서 월간으로 편집·간행하는 “경제정책저널(Wirtschafts-Dienst)”에서 20주년 통일을 기해 독일통일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통일 이후 20년 동안의 동독의 경제적 변화를 기술하면서 동독은 통일 직후 폐허 상태에서 경제적 재건이 시작되어 이제 산업기지로 재건되고 있으나, 원래의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과거 재정적 지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의 노력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미래의 재정정책적 과제들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2) Paqué (2009)

원래 기대한 것과 다른 실망스러운 경제적 성과와 그 결과 여전히 동독에 지원이 계속됨으로써 20년 독일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독일통일 직후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하는 견해들에 대하여 저자는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즉, 현재의 성과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통일 직후 부과된 과제들이 극도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를 새로이 통행 및 이주를 제한하여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독일의 동독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보다 신속히 심어 주어야 할 통일과도기였고, 게다가 당시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양의 통일과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 초기 과도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적인 성공의 책임도 통일경제정책의 과오에 있다기보단, 분단 40년 동안의 구동독 사회주의로 인한 경제기반 파괴와 세계 시장에서의 격리, 그로 인한 산업혁신력의 상실에 있다는 것이다.

### 3) Schröder(2007)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주요한 過誤라고 지적되는 요인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과오 여부를 판단하였다: 구동독(1989년 이전)에 대한 무지로 인한 과오, 통일(과정)에 대한 과오 및

통일독일(즉, 통일 이후)에 대한 과오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2편의 통일과정에서 회자되는 논란거리로, 통일 이전 통일정책이나 통일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는가의 여부, 조기 통화통합에 대한 논란, 통화교환 비율의 적절성, 신탁관리청의 역할(동독 경제를 파괴시켰고, 서독에게 동독 자산을 매각하였다는 것), 원상회복이나 보상이나 하는 사유화원칙, 동서독 간의 종속관계를 발생시켰는가의 여부 및 제3의 길로서의 통일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과오 등을 꼽고 있다.

#### 4) 기타

이상의 저서 외에도 언급할 만한 연구물로서 Kullas(2011)는 독일통일의 완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동서독 간의 수렴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동서독 간 균등화의 과정에서의 장애물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Keuper and Puchta(2010)는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슈에 관한 논문들을 편집하였는데, 경제 및 (일부 경영)학적 분석의 내용은 주로 통화통합, 동독지역 은행제도 발전, 독일통일 과정에서 저축조합의 역할, 환경오염, 철강기업의 구조조정 사례, 동독 기업의 변화관리 전략, 기업혁신 사례 및 미래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이다. Busch *et al.*(2006)은 독일통일 이후 동독 경제의 문제로서 여전히 이전지출이 지속되어 통일비용 부담이 증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문제, 이원화된 노동시장, 노동의 질 및 소득의 격차 등이 발생하였음을 분석하였으며, Busch *et al.*(2009)은 독일 좌익정당 Die Link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로 “구동독지역의 발전 및 위축: 독일통일 20주년 현안”이라는 제목하에 동독 지역경제, 동독 경제의 대내외 산업망, 발전을 위한 요소, 인구학적 변화, 고용, 실업, 생산성, 학문, 연구, 혁신, 투자, 자본스톡, 인프라, 동독 기업, 가계소득, 공공재정, 지역적 격차 등에 관해 다루고, 이에 대한 대책과 경제정책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Schroeder(2009)는 BMI(2013)처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동독의 전반적인 부분, 특히 복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수행하였다.

### III. 독일통일 연구에서의 주요 현안별 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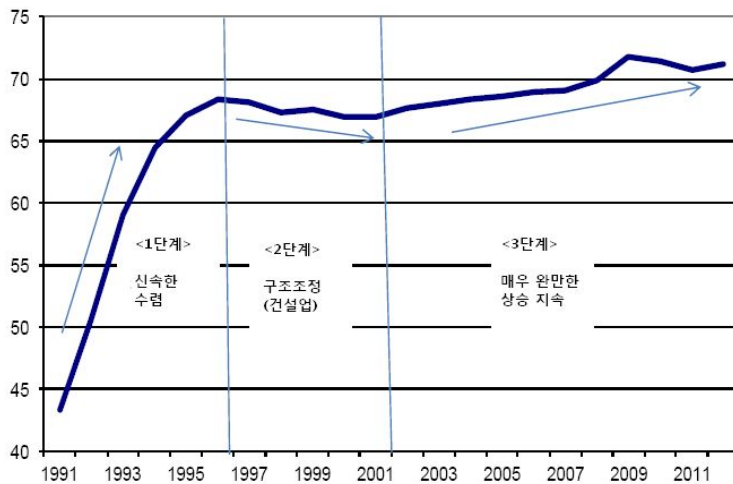
위에서 다룬 주요 기관별 논문집 또는 보고서와 주요 연구자별 저서 등은 대체로 독일통일 이후 동독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기술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독일 내

독일통일 연구에서 주요 현안이 무엇이며 논점들이 어떻게 대조되는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 1. 동서독 간 경제력 수렴

1990년 7월 1일 동서독 간 통화경제사회통합조약이 발효되면서 당시 서독수상인 H. Kohl은 TV연설을 통해 5~10년 내에 동독은 ‘꽃이 만발한 풍광(blossoming landscapes)’<sup>6)</sup>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현실은 이와 달리 통일 이후 1996년까지, 즉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서독의 2/3선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수렴하는 듯하였으나 이후 거의 정체 또는 매우 완만하게 개선되어 2012년 현재 대략 71%선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따라서 관련 연구는 동서독 간의 수렴이 정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활발해져 최근까지 지속되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동서독 간의 1인당 GDP 수렴 추이 (서독=100)



자료: VGR der Länder. (BM(2013), p.8에서 재인용).

5) 이러한 현안들을 별개로 취급하여 설명하나, 실제로 대부분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소개하지 않은 독일 통일 20주년에 즈음한 전문가들의 개별 연구들도 일부 활용하나 지면상 참고문헌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6) 원문으로는 'Blühende Landschaften,' 즉 '꽃이 만발한 풍광'이나 의역하면 '번영을 구가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연설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No one will be worse off than before — but many will be better off. (...) If we work together, we will be able to turn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and Saxony–Anhalt, Brandenburg, Saxony, and Thuringia into blossoming landscapes again, places where living and working really pays off."

첫째,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이다. 지역 간 소득불균형 해소가 더딘 원인으로서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부터 공식적인 독일통일의 날인 1990년 10월 3일까지의 통일과도기<sup>7)</sup> 및 통일 직후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구조적 요인들을 꼽는다. 그러나 전자에 관해서는 통일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동독지역 경제 성과를 보거나 통일과도기 경제정책보다 나은 대안을 쉽게 마련할 수 없다는 면에서 점차 지역 간 소득불균형의 주요 원인에서 배제되고 있다(다음의 3항 참조). 구조적 원인으로서는 일차적인 요인은 노동시장부문에 있다.<sup>8)</sup> 동독에의 실물투자 증대와 서독의 시장경제화 기업경영방식 도입으로 생산성이 상승하였으나(일부는 감소된 취업자 수로 인해), 임금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한 격차로 인해 통일 직후 거시적 충격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을 좀처럼 해소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신규 취업이 제약됨으로써 동독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양적인 인구 감소와 질적인 두뇌 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동서독 간 경제력격차 해소를 어렵게 만들었고(다음 2항 참조), 이로 인한 동독지역으로의 — 기대와는 다른 장기간 —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투자적 지출 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 간 소득격차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차가 지속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동독의 인구 이탈과 (출산을 감소를 포함한)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고령화 진행으로 세수 부진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심지어 실업수당 등 이전소득은 불로소득과 유사하여 소비적 지출 증대로 일시적으로는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으나 이것도 주로 서독 제품의 구매에 사용되어 동독의 제조업기반을 와해시키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작용하였고,<sup>10)</sup> 또한 40년 분단의 기간 동안 공산주의하에서 체득한 비효율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포기하는 등 자구력의 상실로 인해 동서독 간 격차 해소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독지역은 자생력이 불완전하여 서독지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른바 메조지오르노(Mezzogiorno)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7) 각주 1을 참조할 것.  
 8) 제2장에서 언급한 참고문헌 이외에도 동서독 간 임금격차, 생산성격차,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및 사회보장지출 등을 비교한 통계그래프가 수록되어 있는 고일동(2009), pp.8~14를 보라(단, 동서독 실업률 비교는 다음 <그림 5>를 볼 것). 한편, 동서독 간의 격차 유형에는 이외에도 소비, 자산 등 실물경제적 부문과 개방성, 삶의 만족도 등 사회경제적 사고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과 참고문헌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9) Kullas(2011)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혁신능력이 미비하여 총요소생산성 성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인프라투자가 대도시 등에 우선됨에 따라 교통 및 수송비용 감소로 대도시 집적과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동서독의 실질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동독의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인구 이탈이 가속되었고 그 결과 인구밀도가 저수준에 머물고 관료 및 행정적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창업성향을 저하하고 기업 설립을 어렵게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0) Blum(2010), pp.381~400에 수록된 Busch의 논문에는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은 동독의 재건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나 동시에 동독의 경제발전전에 장애물이었음을 지적한다.  
 11) 특히 Brenke and Zimmermann(2009), p.32 이하 및 p.122 이하에서의 Brenke and Zimmermann 및 Goebel *et al.*의 논문과 그리고 Paqué *et al.*(2010), p.359 이하에서의 Ragnitz 논문을 참조할 것.

둘째, 동서독 간의 경제력격차는 인정하되 현재의 서독 대비 동독의 소득수준도 일부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동서독 간 경제력 수렴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그 원인을 규명하여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연구이다. 격차의 주범으로서 구조적 요인은 동독의 경제구조가 산업 공급망 전체에서 작은 부분으로서 주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되어 여전히 부가가치 창출능력뿐만 아니라 동독 기업들이 주도하는 연구능력이 미약한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동독의 산업화와 자본스톡수준이 낮고, 클러스터도 취약하며 대기업이나 기업본사 또는 견실하게 갖추어진 중견기업이 부족한 취약한 구조 속에서 기업의 R&D 능력이 미약한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동독은 낮은 생산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한 수출비중도 서독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동독의 경제성장을 통한 동서독 간의 경제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인적자본이 집약된 제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으로 R&D와 기업혁신을 유도하는 여건의 마련과 중견기업의 육성을 제안하고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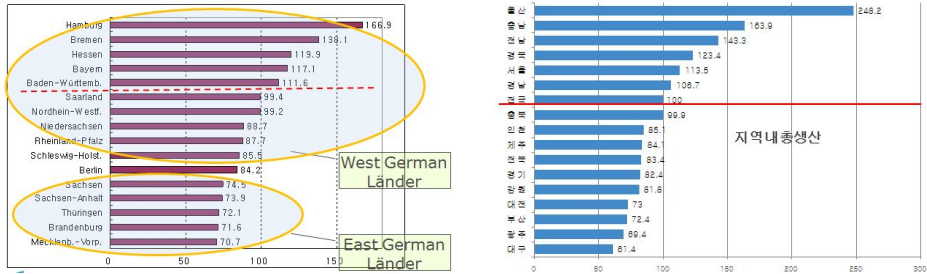
한편, 한 국가 내에서의 지역경제 간 격차 해소는 장기적인 과제로,<sup>13)</sup> 지역 간 격차 존재가 반드시 통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의 <그림 2>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독일의 현재 지역경제력 격차 양상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독일통일로 인한 동독 소득수준의 수렴 정도를 서독의 소득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다소 낮은 목표치를 취한다면, 현재 통일로 인한 동독의 경제적 성과는 어느 정도는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특히 Brenke and Zimmermann(2009)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들, 즉 p.63 이하의 Paqué의 논문과 p.78의 Eichelpasch 논문 그리고 IWH(2009), p.425 이하에 있는 Heimpold의 논문을 참조, 동독의 통일 이후 수출분석을 위해서는 Zeddiel(IWH[2009], p.415 이하)를, 그리고 동독지역에 기업들이 신규 설립되면서 동독기업들의 생산성 추이가 변화하는 것을 연구한 것으로 Bellmann and Gerner (Blum ed.,[2010], p.183 이하)를 참조할 것.

13) 전문가 설문(Holtmann et al.[2012])에 의하면, 85% 정도의 절대 다수가 동서독 삶의 균등화는 2025년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040년이 되어야 비로소 과반(54%)이 동서독 균등화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일부 동독지역은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수준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림 2〉 독일 및 한국의 지역 간 1인당 GDP 비교 (각 국가의 평균 1인당 GDP=100)

- ① 통일독일(2008년): 71~167%      ② 한국(2012년): 61~164%(울산 248% 제외)



자료: SBD(독일통계청) 및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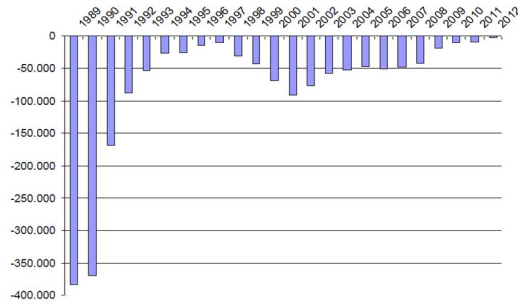
## 2. 동독지역의 인구 변화와 지역경제 발전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동서독 경제력격차 해소가 부진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는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의 노동력 감소이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첫째, 통일과도기에서 가장 극심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비록 그 정도가 매우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지속된 동독 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 특히 청년층의 이주와 둘째, 통일 직후 대폭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독 수준에 근접한, 그러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동독지역 출산율, 셋째, 급속히 진전된 고령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이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구동독지역의 공동화와 맞물려 지금까지도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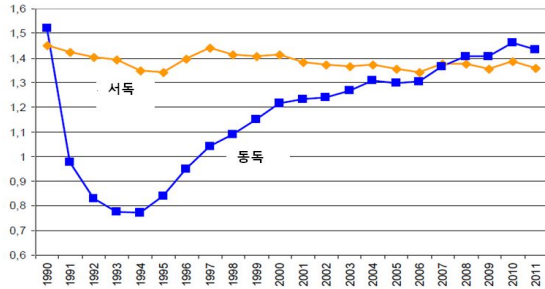
이상의 동독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직간접적으로 동독의 지역경제 발전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주제들을 촉발시켰다. 경제통합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발전이 공간적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도시발전으로 인한 행정구조의 변화, 어떤 도시에 거주하는가에 따른 개인의 사회위상의 결정 그리고 주거시설 건축 지원과 도시건설의 발전유형과의 관계 등이 분석되었다(Blum[2010], 제2편 참조).

14) Ragnitz(Brenke and Zimmermann[2009], p.110 이하)와 국내 문헌으로는 김창권(2010)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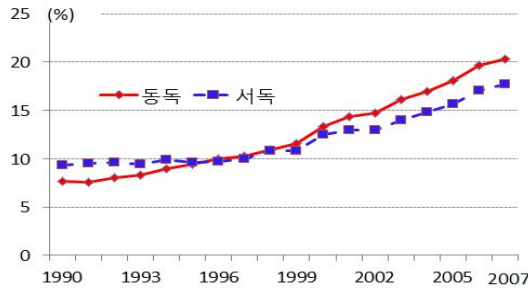
〈그림 3a〉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  
의 순이주(-)  
(단위: 명)



〈그림 3b〉  
동서독 간 총출산물  
비교



〈그림 3c〉  
동서독 간 고령화 추이  
비교 (65세 이상 비중)



자료: 그림 a, b는 SBD(독일통계청), BMI(2013), pp.95~96에서 재인용, 그림 c는 SOEP Monitor 1984~2007, Schroeder,(2009), p.29에서 재인용.

### 3. 독일 통일과도기(1989~90) 경제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

통일과도기의 경제정책은 독일통일의 경제적 성과 향방을 가늠하는 방아쇠(trigger)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매년 주기마다 통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논문들에는 통일과도기 경제정책, 예를 들면 통화통합, 사유화정책, 임금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대체로 이들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지 사반세기에 도달하면서 중장기적 통일성과와 함께 통일과도기 경제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내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다른 의견을 발견하게 된다.<sup>15)</sup> 따라서 통일과도기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과 체제통합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독일통일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 직후,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사회주의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들은 IMF 및 IBRD의 경제개혁 모형인 이른바 Washington Consensus 등을 활용하여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사유화와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수행하여 성장과 안정화를 추구하려고 하였다.<sup>16)</sup>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만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독일통일에는 체제전환뿐만 아니라 동서독 간의 체제통합 과제도 함께 주어졌다.<sup>17)</sup> 최상의 선진경제국가들 중의 하나인 서독 경제로 통합됨으로써 서독 경제는 통일 이후 동독 경제에 대하여 앵커(anchor)로서 통일과정의 버팀목이 된 플러스 요인일 수 있으나,<sup>18)</sup> 한편으로는 통일과도기에 동독민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를 목격함으로써 동독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동서독 간 생활수준이 신속히 수렴될 것이라는 희망적 목표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기에 충격요법(shock therapy 또는 big-bang approach)의 경제정책을 수행하였다.<sup>19), 20)</sup>

통화통합의 주요 논점은 통합의 시기와 교환비율의 적정성으로 모아진다. 통일과도기 시장환율이 4:1이 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상징적으로 1:1의 교환비율로 표시되는 독일통화통합은<sup>21)</sup>

15) Schröder(2007), Paqué(2009)와 Schäuble 및 Brenke(Brenke and Zimmermann[2009], 각각 p.8 및 p.18 이하)를 보라.  
 16) 이외에도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금융제도(two-tier banking system)'의 구축, 금융 및 자본시장 구축, 건전한 재정정책 및 금융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 무역 및 외환자유화, 효율적이고 공평한 국유기업 및 국유재산 사유화, 시장에서의 기업 생성 및 영업활동 보장, 국가보조금 지원 금지, 신규기업들의 창립, 시장경제 질서 및 규칙 등의 제정, 기업과 산업 부문에서의 청산 및 회생, 유연한 노동시장 형성, 그리고 신규 법·행정체제, 조세체제 및 교육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17) 독일만의 예외적인 체제전환경로를 설명한 Wagener(Blum[2010], pp.77~94)참조.  
 18) 동독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으로 흡수됨으로써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법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고, 이행과정에서도 서독민의 동독지역 파견을 통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관한 수많은 지식과 능력을 손쉽게 보유하게 되어 불과 2~3년 사이에 법, 행정, 교육 및 경제제도 분야의 전환과정이 완성되었다. 구동독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여타 구사회주의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통화·경제·사회통합으로 인해 서독의 시장경제, 사회 및 법제도 등을 이른바 1:1 척도로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였다. ② 구동독은 자동적으로 ECU의 회원이 되었고, ③ 체제전환, 경제 재건 및 서독 시스템의 이식이 거의 1년 안에 동시에 진행되었다. ④ 동독 시민들은 체제전환 과정이 역전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⑤ 통일이 인해 동독은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여러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었다. 서독의 선진금융체제와 硬性貨幣의 하나인 D-Mark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이 견고한 통화를 주도하는 부담이나 극심한 인플레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⑥ 아울러 통일이 인해 서독으로부터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가 대량 유입되었다.  
 19) 실제로 당시 동독 주민들은 신속한 통일을 원했고 또한 동독지역이 곧바로 유럽연합에 편입하기를 바랐다. 이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흡수통합밖에 없었다. H. Kohl 수상이 1989년 11월 28일, 이른바 '10개 조항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동서독 간 연방제 운영과 유럽통합에 맞추는 등 단계적 통합을 염두에 두었고, 또한 Kohl 수상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듯이 그 자신도 독일통일은 1992년 유럽공동시장 이 완성된 이후, 즉 적어도 3~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90년 1~2월 동독에서 서독으로 약 10만명의 대량이주가 발생하였는데(그림 3a 참조), 이에 당시 동독 Modrow 총리는 대량이주와 동독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서독정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서독의 입장에서선 처리할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고, 그 대신 경제·통화통합을 제안하였다. 이후 3월 18일 동독의 인민선거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연립내각이 구성되었고 5월 18일 동서독 간 통화·경제·사회통합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협상과정을 거쳐 구동독 지역은 헌법 23조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게 되었다. Bundesregierung, 20 Jahre Deutsche Einheit, www.bundesregierung.de, 2010, p.19 이하 참조.  
 20) 2장에서 언급한 최근의 통일독일 경제 연구를 살펴보면, 사유화정책이나 임금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대체로 드물다. 다만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한데 이에 관해 상세 기술하기에는 지면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요 연구들의 견해를 간단히 대비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통일과도기 통화통합의 요약정리를 위해서는 고일동(2009)을 참조하라. 참고로 사유화정책에 관해 Brenke(Brenke and Zimmermann[2009], p.31 이하)은 통일직전 구동독지역 경제가 원래는 작동 가능하였으나 잘못된 사유화정책으로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어렵게 했다는 가설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21) 동서독 간 통화통합조약 교섭과정에서 애초에는 독일연방중앙은행의 제안대로 동서독 화폐 간 교환비율을 2:1로 하려고 하였으나, 동독 주민들의 계속된 데모와 동독 총리 de Maizière의 고집으로 임금, 연금 및 임대료 등 플로우 소득과 일정 한도의 저축(성인 4,000; 연금수령자 6,000; 미성년자 2,000 마르크까지)에 관해 1:1로 교환비율을 설정하였고, 한도초과분의 저축에 대해서는 2:1로 교환이 이루어져 전체 평균적으로 약 1.8:1의 교환비율이 형성되었다.

동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상실시켰고 그 결과 동독 실물경제의 전적인 와해로 이어져 대량실업을 촉발시켰으며, 아울러 사유화과정에서 동독 기업들의 매각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통일비용을 증폭시킨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통일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충당을 어렵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국가채무를 증대시켜 재정의 불건전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과도기 당시에 통화통합의 시기를 늦추어 동독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교환비율도 시장환율에 근접한 적정비율로 하는 통화통합이 가능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통일 직후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재무부 장관인 Schäuble(Brenke and Zimmermann[2009], pp.8~17)은 통일과도기를 회고해 볼 때, 통화·경제·사회 통합과정에서 또는 국가협약 체결과정에서 결정적인 과오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 당시의 정치, 경제적으로 긴박한 제한조건, 즉 ① 동독지역에서의 인구 대량 탈출의 압력이 컸고, ②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으며, ③ 정치권 내에서 동독민에 대한 홀대가 있고 동독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과 ④ 분단장벽을 없애는 데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나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다.<sup>22)</sup> 통일과도기에서는 통화통합의 시기와 교환비율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수라는 것이다. 즉, 경제력의 격차가 큰 두 개의 이질적인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통일과도기에 들어서면 통화통합은 조속히 시행될 수밖에 없고 교환비율도 낮은 경제력수준을 보이는 경제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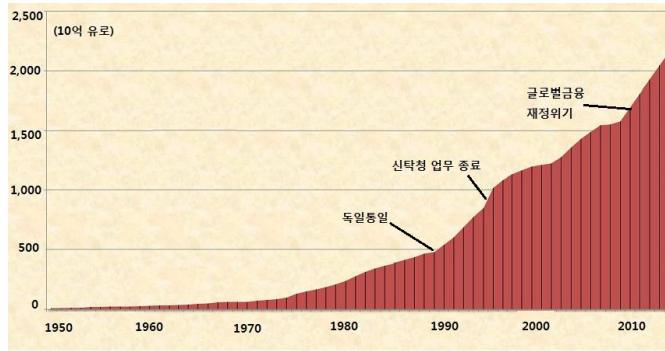
#### 4. 통일비용과 재정건전화

실물경제 와해, 대량실업, 대량이주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통일 과도기와 통일 직후의 거시적 불안정은 원래 계획하였던 통일사업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지출을 발생시켰다. 통일 직후 5년여 정도면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시적인 독일통일연대세의 부과 및 사유화 매각 수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통일비용의 증폭으로 야기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독일통일연대세의 연장과 부가가치세율의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증세와 공채 발행이 행해졌다. 그 결과로 장기적으로 독일 재정의 불건전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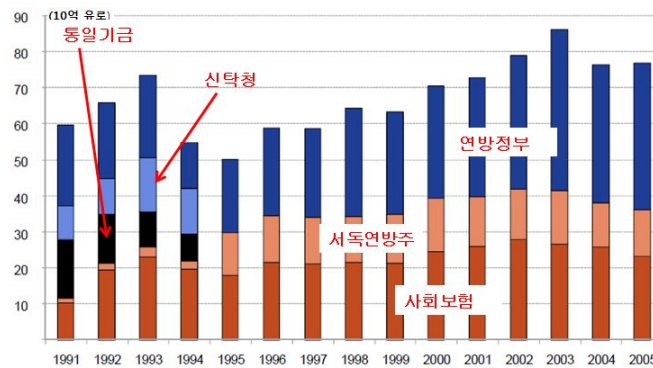
22) Brenke(Brenke and Zimmermann[2009], pp.18~31)도 경제적 측면에서 통화통합이 몰락해 가는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토대를 단번에 그리고 전적으로 와해시킨 재앙이었다고 하나 다른 정치적 대안이 부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타났는데, 이에 관련된 논의들이 최근 대두되었다.

〈그림 4a〉  
독일의 국가부채 추이



〈그림 4b〉  
동독으로의 순이전지  
출 출처 유형



자료: 그림 a는 SBD(독일통계청), 그림 b는 Blum(2011), p.80에서 재인용.

2010년 말 현재 약 2조유로에 달하는 독일 국가부채는 통일과정에서의 구동독 부채를 승계한 것과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재정 충당에서 상당부분 비롯되었다(그림 4a 참조).<sup>23)</sup> 이론적으로는 통일과 함께 동독의 연방주들은 부채 없이 시작하였으나, 현재 동독의 부채는 대략 전체의 15%(베를린 포함 25%)에 달하며, 또한 몇몇의 동독 연방주는 연방주에 귀속된 국가부채의 평균치를 상회하곤 한다. 물론 통일비용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에 집계하기가 쉽지 않으나 통일 이후 20년이 된 시점인 2009년까지 대략 2조유로가 소요되었다고 본다(동독 지역의 조세수입을 차감한 순비용은 약 1조 6천억유로).<sup>24)</sup>

이와 같이 국가부채가 누적된 이유가 통일 초기 너무 낙관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임은

23) Zinsmeister(Brenke and Zimmermann[2009], pp.146~160)를 참조. 이외에도 관련 연구로 Koschyk(Paqué et al.[2010], pp.361~365)은 과거 성공적인 재정간전화 사례와 미래의 당면한 재정정책 과제를 서술하였고, Freye(WH[2010], pp.105~112)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채무 추이를 분석하면서 부채의 증가가 통일 초기 잘못된 경제전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유 이외에도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산업기반의 와해나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는 동독지역의 조세수입능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인 바, Deuverden(WH[2010], pp.91~104)은 동독에서의 그 원인으로 낮은 소득과 낮은 이윤 및 취약한 지역경제구조로 보았다.

24) Schroeder(2009), p.118 이하 참조.

주지의 사실이다. 전술하였듯이 통일 이후 수년 내에 통일이 어느 정도 완성될 것으로 보고 오로지 약간의 이전지출과 통일기금 및 신탁청의 사유화 매각대금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이다(그림 4b 참조). 1990년대 중반 건설업 분야 등의 통일특수가 종료되면서 동독의 경제성장 추동력이 매우 미약해진 상황에서 재정건전화의 압력까지도 존재하여, 사전에 정부지출을 적절히 감소시키지 못했기에 투자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동독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대협약 1이 발효되어 신연방주도 연방주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모자라는 재정수입을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대협약 2가 가동되어 동 기간 동안 대략 1,565억유로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예상을 상회한 오랜 기간과 큰 폭의 통일비용을 충당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가재정조정제도에 대하여 최근 바이에른주나 헤센주 정부에서 주정부 간 재정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조정제도의 왜곡 등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이러한 국가재정조정제도를 재편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이면서 재정건전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 5. 기타(동독의 실업, 노동시장구조, 노동시장정책 분석 및 이주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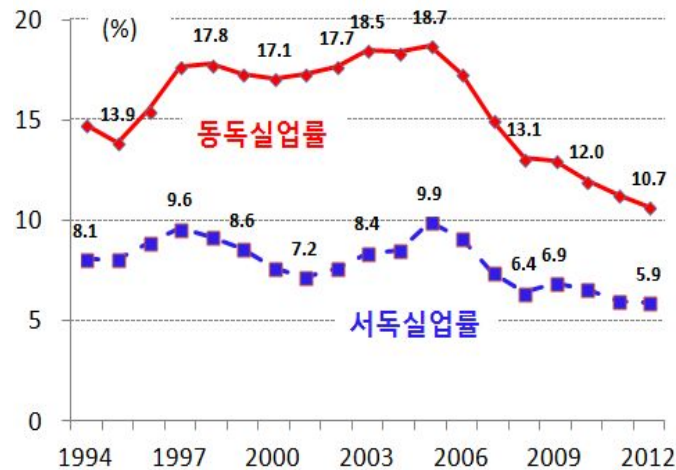
동독의 노동시장 및 실업구조, 노동시장정책과 이주문제 등을 기타로 언급한다고 해서 이들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통일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통일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히 분석이 수행되지는 않고 통일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다루어졌던 이슈라는 점에서 기타로 묶었다. 더욱이 동서독 모두 2005년을 정점으로 실업률이 하락하여 2012년 동서독의 실업률이 각각 10.7% 및 5.9%로 독일통일 이후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그림 5), 동독민의 서독으로의 순이주도 2000년대 들어서 점차 감소되어 최근에는 인구 유입과 유출이 거의 동일한 상황이기(그림 3a) 아무래도 주요 현안에서 벗어난 듯하다.<sup>26)</sup> 사실 독일통일 직후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리고 쉽사리 고실업이 해소되지 않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량실업의 원인과 대책, 과소고용자 유형을 포함한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25) Döring and Blume(2013) 참조. 현행 국가재정조정제도하에서 각 주정부의 초과부담의 고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다변량분석으로 각 주정부의 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근의 정책연구로 SVR, (2013), *Consolidation of Public Budgets: No Room for Complacency*, Ch. 7,을 참조할 것.

26) Brautsch(WH[2010], pp.83~90)는 노동시장정책적 조치들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는 통일과정에서의 노동경제학 관련 연구들이 보다 미시적으로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Lutz(Blum[2010], pp.337~352)는 독일통일 이후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서독 시스템을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면 매우 높은 수준의 노동력의 이동을 필요로 하나 이에 맞는 적절한 노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노동력이 중요하나 이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였고, Behr and Ehrlich(Blum[2010], pp.201~216)는 노동시장에서의 전문 인력 성장이 지역적 경제발전을 견인할 주요 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동서독 대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의 투자 및 수익을 비교하거나, 비정규직, 파트타임 형태의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가 동독지역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IWH[2009], pp.300~304). 그리고 인구 감소가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동독지역의 인구 감소가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을 줄이지 못하는 대신 고숙련 노동자를 희소하게 하여 동독이 산업중심지로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됨을 지적하였다.<sup>27)</sup>

〈그림 5〉 동서독 실업률 비교



자료: SBD(독일통계청).

27) 아울러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장기적인 이주가 어떻게 노동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김창권(2010)을 참조할 것.

## IV. 종합적 평가 및 시사점

### 1. 종합적 평가

지난 사반세기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통일의 경제적 성과 및 관련 정책 평가 등에 관한 연구들은 <그림 1>의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추이와 연계하여 그 동향이 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통일 직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통일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에 따른 거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다. 즉, 통일과도기에서 입안된 경제통합을 위한 제반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통일노정을 밟도록 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통합 초기 설정되어야 할 가격자유화와 같은 시장경제적 제도, 경제통합의 핵심적인 선결조건인 통화통합정책, 이외에도 사유화정책, 임금정책과 투자지원정책,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그리고 재정충당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통일비용 규모 추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통일 직후 발생한 대량실업과 대량이주와 같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책들의 적절한 정책적 조합 등에 관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큰 폭의 대량실업이 지속되면서 통일 초기에 수립하였던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자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제2단계에서는 통일비용의 수정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조정,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 수립 및 그 성과 평가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경제력격차의 원인인 해소책 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제3단계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독일통일 20년을 전후로 한 기간에는 통일의 중장기적 경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과도기의 경제정책들에 관해 회고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2단계부터 이어진 동서독 간의 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의 원인분석과 이것이 동독지역별로 다르게 고착되어 나타나는 지역경제별 격차에 관해서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통일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누적 형태로서의 국가부채 추이와 이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는 동독의 인구 변화이다. 인구 유출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함께 결합하여 동독의 노동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감소시켰는데, 이는 장기적인 동독의 경제동력을 상실케 하여 동서독 생활수준의 수렴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즉, 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의 생활과 생산의 입지로서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 구체적인 장애요소들로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전문 노동력의 부족, 고령화 및 젊은 연령 인구의 이탈, 주정부 및 시·군 자치단체 재정 등의 악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통일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통일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거나 또는 여태까지의 통일경제정책이 심화되는 과정이나 외부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동독 경제가 적응하는 과정 등을 주로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독지역 재건 및 발전적 모델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빈약하다거나 미래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sup>28)</sup>

예외적인 것으로 Holtmann(2012) 및 Blum *et al.*(2011)이 특기할 만하다. 전자는 통일경제학 연구가 통일 이후 변화를 기술하는 것이나 인프라 및 실물자본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시하는 접근보다 혁신지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것을 강조한다. 동서독 간 생활수준격차 해소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장기에 걸쳐 지속적인 산업 R&D 지원, 연구 인프라 강화,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동독지역의 기술공학적 경쟁력을 높여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정책의 여러 지원조치들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바, 예를 들면 미래적 산업 및 기술 분야와 지역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정책을 집중·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후자는 통일 20주년 시점에서 동독 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6개 연구소 공동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소수 의견도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 2. 시사점: 체제통합보다 체제전환을 우선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통일 25년의 경제적 성과 및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들의 동향분석은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왜 독일통일 이후의 동독 경제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독일통일에서 집행된 경제정책의 실제 결과를 통해 우리가 한반도 통일 시 취할 경제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통일과정도 독일식 모델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sup>29)</sup> 따라서 우리도 미래에 통일과도기의 매우 짧은 기간에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독일이 선택한 사례들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28) Holtmann(2012) 참조. 미래의 발전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Holtmann 교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연구프로젝트로 제2장에서 설명한 SFB 580를 꼽을 수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통일독일에서의 동독의 미래 경제발전 모델 및 전략을 연구하였다.

29) Paqué 교수도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처음부터 주민 이동을 전면 허용하는 독일식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과 달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주장하였다. 2014. 3. 4.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4/2014030402035.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4/2014030402035.html) 신문기사 발췌.

의미를 제공해 준다.<sup>30)</sup>

통일을 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선택 범위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최적 효율과 정치적 측면을 포함할 경우의 현실적 최대 효과 사이가 될 것이다. 대내적인 통일 대비는 통일과도기에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 북한 주민 요구를 수용한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우세할 것이기에 —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제적 최적화 부문 내에 수용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 시 북한 난민의 남한으로의 대량이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통화통합이나 대규모 경제지원일 수 있으나 이것이 통일의 동태적 전 과정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 또한 법제도적 측면의 가치 보존을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최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 사유화 과정에서의 보상을 하기보다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를 선택했던 것이 있다. 또한 시나리오의 범위를 축소해 줄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바, 즉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까지도 포함한 상황에서 통일에 따른 각국의 이해득실 여부를 분석하여 최적의 통일경제정책 선택을 위한 비경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독일 연구가 우리나라의 통일경제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통일과도기의 경제정책이나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통일 이후 장기적 과정에서 중요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연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 간의 최적 통화통합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인데, 이는 정치적 통일효과와 경제적 효율 간 상충될 수 있기에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생산기반 와해, 대량실업, 대량이주 및 물가불안 등 거시경제 안정화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서 통일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 초기부터 장기적 과제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문의 정책들에 대한 연구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적절한 통일사업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적정 통일사업의 단계적 설계 및 비용규모 추정과 통일사업 공공지출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연구들이 속한다.

셋째, 미래지향적 분야로 통일 초기부터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30) 여기에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법·사회·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자료 확보 및 정리(literature survey, categorization)와 DB 구축도 포함될 수 있다.

할 부문 또는 궁극적으로 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부문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한국 전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 미래산업 및 미래도시 셋업을 통한 장기적 산업 및 생활입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한 연구로서 적정 인프라 규모 및 우선순위에 입각한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재개발 그리고 행정구역 재편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를 도모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통일과정 전반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문 연구가 요구된다. 즉, 생산성 제고와 기술혁신을 유인할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바, 통일과정에서의 산학협력(대학-기업)의 중요성, 대학교육의 혁신, 국책(과학)연구기관 등의 효율적인 재편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북한지역으로의 혁신이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독지역의 미래 경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원천으로서 동독 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혁신에 관한 연구와 이를 지원해주는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동독 산업 육성전략 등을 참조할 만하다.<sup>31)</sup>

다섯째, 통일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부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는 무엇보다도 인구 이동과 함께 출산율 감소, 고령화에 따른 실질적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물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통일한국의 장기적인 경제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공동화를 적절히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쓸모없는 과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투자할 소지도 있으며, 이와 같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적 투자(학교, 병원과 우체국, 터미널과 같은 공공시설 등)를 재차 감축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를 가속케 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통일한국의 과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통일 시 통일로 인한 충격을 흡수 또는 완화하면서 남북한 간 동질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스위트 스팟(sweet spot)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체제통합보다 체제전환을 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통일한국 대비전략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통일 시 급변 사태로 표현되는 통일과도기에서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대량이주를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제안하거나(DMZ 존재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시장환율을 고려하지

31) 이른바 등대전략으로 독일 작센주(주수도: Dresden)의 산업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대한 미시경제적 지역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않은 통화통합은 동독의 생산기반 와해, 대량실업을 초래한 것을 목도한바, 우리의 경우는 단계적인 통합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 예를 들면 상품시장 통합 이후? — 시장을 고려한 교환비율을 설정한 남북한 통화통합을 시행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조치 모두 통일과도기의 혼란을 줄여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 독일 통일과도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sup>32)</sup>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통일과도기에 들어선다면, 다른 대안의 선택 없이 정치적 결정에 의한 체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 체제전환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윗 스팩 정책으로서 체제통합보다 체제전환을 우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2014년 6월 1일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북한의 체제전환을 이끌어 내면서 장기적으로 체제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 통일이 된 상황에서 남한의 입장에선 시장성을 무시한 남북한 간 통화교환비율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엄연히 남북한 간 국경이 존재하기에 북한 주민의 대량이주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요인들을 고려하여 체제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에 노출되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통일이 도래하여 체제통합이 진행된다면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비교적 쉽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독일통일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작용한 것이 분단 40년 동안 글로벌 시장경제와 격리된 결과로서 동독 인적자본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비효율적인 노동관행이 몸에沁은 동독의 노동자들이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서도 쉽게 고용이 유지될 수 없었기에 장기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재 가상의 통일하에서 체제통합 이전에 체제전환에 중점을 두어 북한 노동자들에게 시장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서독 간 경제력격차를 수 배로 상회할 남북한 간의 경제력격차로 인해 통일한국의 연착륙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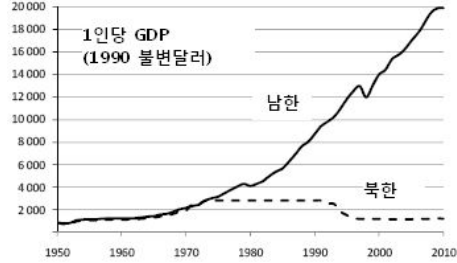
32) 이와 관련하여 김창권(2010), pp.50~51를 참조.

〈그림 6〉 동서독 간 및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비교

① 동서독 소득격차



② 남북한 소득격차



자료: Blum(2011), p.155.

통일 대비 스윙 스팟 전략이란 환언하면 통일 이전부터 북한을 더욱 개방토록 유도하고 남북경협을 더욱 강화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높임으로써 통일 이후 극적인 상대가격 변화와 수요 변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 이전부터 남북교역에 대한 제반 규제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직적·수평적 분업구조를 도출해야 한다. 추후 체제통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적 수지에선 적자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그리고 통일 전 과정의 동태적 측면에선 흑자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일경제정책도 독일의 통일정책 전문가인 E. Bahr의 표현처럼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sup>33)</sup>

33) 통일부의 교류협력국을 한반도개발청(가칭)으로 확대·재편하여 보다 장기적인 통일한국의 개발비전을 제시하고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남북 경협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율하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

## 참고문헌

- 고일동, 「통일후 동독경제의 상황변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북한경제리뷰』, 2009년 9월호, KDI, 2009.
- 김창권,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한독경상학회, 28권 1호, 2010.
- 루돌프 히켈, 『독일통일 10년에 대한 중간평가』, 서울: FES, 2000.
-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Bach, S. and H. Trabold (eds.), “Zehn Jahre deutsch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Vol. 69, No. 2, 2000(독일통일-경제-사회통합 10년).
- Blum, U. (ed.), *20 Jahre Deutsche Einheit: Von der Transformatio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Sonderheft 2010/3, IWH, 2010(독일통일 20주년: 체제전환에서 통합으로).
- Blum, U., “Kann Korea vom deutschen Einigungsprozess lernen?” *Wirtschaft im Wandel*, Vol. 17, No. 4, IWH, 2011(독일통일 과정으로부터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
- Blum, U. et al., *Ostdeutschlands Transformation seit 1990 im Spiegel wirtschaftlicher und sozialer Indikatoren*, 2nd ed., Halle, 2010(경제사회 지표를 통한 통일 이후 동독의 체제전환과정 평가).
- Blum, U. et al., *Wirtschaftlicher Stand und Perspektiven für Ostdeutschland*, Studie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IWH, DIW, ifo Dresden, IAB, HoF and RWI, 2011(동독의 경제현황 및 전망: 6개 연구소 공동 연구).
- BMI,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3*,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3(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독일정부의 연차보고서).
- Brenke, K. and K. F. Zimmermann (eds.), “Die Wirtschaft in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Fall der Mauer — Rückblick, Bestandaufnahme, Perspektiven,”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Vol. 78, No. 2, DIW(장벽 붕괴 후 20년 구동독경제: 회고, 현황 및 전망).
- Bundesregierung, *20 Jahre Deutsche Einheit*, [www.bundesregierung.de](http://www.bundesregierung.de), 2010(20주년 독일 통일: 연방정부 발행).
- Busch, U., R. Land, H. Thie, and A. Willisich, *Probleme und Perspektiven Ostdeutschlands*, Thünen-Institut für Regionalentwicklung e.V, 2006(동독의 문제 및 전망).

- Busch, U., W. Kühn, and K. Steinitz, *Entwicklung und Schrumpfung in Ostdeutschland, Aktuelle Probleme im 20. Jahr der Einheit*, Verlag Hamburg, 2009(구동독지역의 발전 및 위축: 독일통일 20주년 실제 문제들).
- Döring, T. and L. Blume, “Wie die deutsche Einheit die Länder im Finanzausgleich belastet hat,” *Wirtschaftsdienst*, Vol. 93, Issue 6, 2013(독일통일과 연방주 간 재정조정제도의 부담).
- Holtmann, E., J. Ragnitz, and K. Völkl, *Ostdeutschland 2020: Die Zukunft des Aufbau Ost*, FES, 2012(동독의 2020년: 동독재건의 미래).
- IWH, *Zehn Jahre Deutsche Einheit — Bilanz und Perspektiven*, Sonderheft 2/2001, 2001(10년의 독일통일: 현황과 전망).
- IWH, “20 Jahre Deutsche Einheit Teil 1,” *Wirtschaft im Wandel*, Vol. 15, No. 10, 2009(20년의 독일통일, 1편).
- IWH, “20 Jahre Deutsche Einheit Teil 2,” *Wirtschaft im Wandel*, Vol. 16, No. 2, 2010(20년의 독일통일, 2편).
- Keuper, F. and D. Puchta (eds.), *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 Rückblick und Ausblick*, Wiesbaden: Springer—Gabler, 2010(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20년 독일: 회고 및 전망).
- Kullas, M., *Der Konvergenzprozess zwischen Ost — und Westdeutschland: Hemmnisse und politische Handlungsmöglichkeiten*, Verlag Dr. Kovac, 2011(동서독 간의 수렴과정: 장애물 및 정치적 처리 가능성).
- Paqué, K.-H.,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München: Carl Hanser, 2009(독일통일의 경제적 분석).
- Paqué, K.-H., J. Ragnitz, H. Koschyk, U. Heilemann, and K. Schroeder, “20 Jahre Deutsche Einheit,” *Wirtschaftsdienst*, Vol. 90, No. 6, 2010(독일통일 20년).
- SBD(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https://www.destatis.de>(독일통계청 홈페이지)).
- Schroeder, K.,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 Eine Wohlstandsbilanz,” Gutachten für die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Berlin, 2009(장벽 무너진 후 20년 동독의 복지에 대한 중간 평가).
- Schröder, R., *Die wichtigsten Irrtümer über die deutsche Einheit*, Freiburg im Breisgau u. a.: Herder, 2007(독일통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오류들).
- SVR(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Jahresgutachten 2013/14(독일경제자문위원회의 연차 독일경제평가분석), 2014.